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 · 21차 · 22차 국가보고서

2022.6

서 문

1.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 제9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0, 21, 22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한다. 본 보고서는 지난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채택한 ‘정부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CERD/C/2007/1)’에 준하여 작성되었다.

2. 본 보고서는 지난 2017년과 2021년 사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해 취한 입법·사법·행정 및 기타 조치들과 개선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의 제17, 18, 19차 통합보고서(CERD/C/KOR/17-19) 심의 결과, 위원회가 제기했던 우려 및 권고사항(CERD/C/KOR/CO/17-19)에 관한 최근의 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22년 1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인종차별철폐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최종견해 38).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2022년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송부받았다. 정부는 2022년 4월 6일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반영 여부 관련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위 의견을 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1부 일반

귀화

4.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으로의 귀화자의 수는 총 55,549명이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누적 귀화자의 수는 총 115,688명이다. 귀화자의 출신국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순서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귀화자는 13,885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출신은 7,932명(57.1%), 베트남 출신 4,076명(29.4%), 필리핀 출신 375명(2.7%), 캄보디아 출신 302명(2.2%), 몽골 출신 145명(1.0%)이었다.

표 1: 연도별 귀화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귀화자	10,108	10,086	11,556	9,914	13,885

무국적자

5. 2020년말 기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무국적자는 총 156명으로, 그 중 91일 이상 장기 비자로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 후 체류 중인 자는 102명, 90일 이하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미등록상태로 체류 중인 자는 54명이다.

6. 무국적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유형으로는 i) 국내 입국 전 무국적자로 상주국 으로부터 여행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¹⁾, ii)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원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원 국적을 포기하여 일시적²⁾으로 무국적 상태가 되는 경우, iii) 위장결혼 또는 위변조 여권 행사로 유죄판 결 등을 받아 국적이 취소³⁾된 후 원 국적을 회복 중인 경우, iv) 탈북화교⁴⁾, 베트남 난 민⁵⁾ 등의 경우로, 이들의 경우에도 다른 국내 체류 외국인과 같이 「국적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표 2: 귀화 유형별 신청 및 허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무국적자라고 하더라도 국적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적법상 규정하고 있는 귀화의 방법으로는 일반귀화(제5조), 간이 귀화(제6조), 특별귀화(제7조)가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근거조항	요 건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F-5)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 4.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 것 5.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어능력,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7.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 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	* 국내 5년 거주 및 대한민국 영주 체류자격 소지 요건을 제외하고는 일반귀화 요건과 동일 - (3년 이상 거주 대상)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③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1)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새로운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고려인(주로 우즈베키스탄 거주)의 경우이다.

2) 재취득이나 국적회복을 통하여 신속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3)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제8조)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4) 북한에서 출생하거나 정주하던 중국 국적자가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경우, 그 탈북자는 중국 국적자임에도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무국적자로서, 국적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5) 월남전 패망으로 월남을 탈출한 일부 베트남인들이 국내에 정착, 국적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근거조항	요 건
	- (2년 또는 1년 이상 거주 대상) ①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②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 ③ 혼인이 중단된 경우로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 또는 양육 하여야 할 사람
국적법 제7조 (특별귀화)	* 국내 거주기간 및 생계유지능력 입증 요건 면제, 나머지 일반귀화 요건과 동일 - (대상)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성년 후 입양된 자는 제외)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체류 외국인

7. 국내 체류 외국인⁶⁾의 수와 국내 주민등록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감소하였다. 2020년말 기준으로 국내 주민등록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3.93% 수준이다.

표 3: 연도별 국내 주민등록인구 및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 체류 외국인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국내 주민등록인구	51,529,338	51,696,216	51,778,544	51,826,059	51,849,861	51,829,023
비율	3.69%	3.96%	4.21%	4.57%	4.87%	3.93%

8. 국내 체류 외국인을 주요 국적별로 분류하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036,075명 중 중국인은 894,906명(44%), 베트남인 211,243명(10.4%), 태국인 181,386명(8.9%), 미국인 145,580명(7.2%), 필리핀인 49,800명(2.5%), 일본인 26,515명(1.3%) 등이다. 2020년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036,075명 중 외국 국적의 동포는 811,211명(39.8%)이고,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의 81.7%인 662,845명은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9.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6년까지 20만명대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25만 명이 넘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19년부터 39만 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말 기준 공식적으로 집계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19.2%이다.

6) 장기거주자 및 단기방문자, 합법 및 불법체류자 모두 포함한다

표 4: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국내 체류 외국인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합법체류 (단기/장기)	1,929,457 (597,399/1,332,058)	2,012,481 (679,874/1,332,607)	2,134,375 (792,853/1,341,522)	1,643,879 (425,752/1,218,127)
불법체류 (단기/장기)	251,041 (167,140/89,901)	355,126 (264,044/91,082)	390,281 (293,150/97,131)	392,196 (281,857/392,196)
불법체류비율	11.5%	15.0%	15.5%	19.2%

10.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는 2002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사증 발급 심사강화 등 조치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결혼이민자 비율도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체류외국인 감소로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결혼이민자 비율은 다시 증가하여 2020년 말 기준 8.3%를 기록하였다. 이 중 남성은 30,716명(18.2%), 여성은 137,878명(81.2%)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국적별로는 중국인 60,072명(35.6%), 베트남인 44,058명(26.1%), 일본인 14,595명(8.7%), 필리핀인 12,002명(7.1%), 태국인 5,929명(3.5%), 캄보디아인 4,638명(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국내 체류 외국인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결혼이민자	154,457	159,206	166,025	168,594
결혼이민자 비율	7.1%	6.7%	6.6%	8.3%

난민 및 난민신청자

11. 대한민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20년말 누적 난민인정 신청자 수는 총 71,042명으로,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1,091명⁷⁾이며, 인도적 사유에 의해 체류를 허가받은 자(인도적 체류자)⁸⁾는 2,370명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6,766명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가 종결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7) 난민인정자 수는 법무부심사로 인정되는 경우 및 법무부심사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의 결과로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8)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표 6: 난민, 인도적 체류자의 연도별 통계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난민인정자	413		121		144		79		69	
	217	196	69	52	73	71	38	41	37	32
인도적 체류자	1,210		316		508		231		155	
	973	237	204	112	455	53	183	48	131	24

12. 2020년말까지의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를 성별, 연령별, 국적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난민, 인도적 체류자의 성별 구분

(단위 : 명)

구 분	합계	남성	여성
난민인정자	1,091	638	453
인도적 체류자	2,370	1,825	545

표 8: 난민, 인도적 체류자의 연령별 구분

(단위 : 명)

구 분	합계	0-4세	5-17세	18-59세	60세 이상
난민인정자	1,091	209	153	727	2
인도적 체류자	2,370	271	215	1,867	17

표 9: 난민의 국적별 구분

(단위 : 명)

합 계	미얀마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	콩고민주 공화국	기타
1,091	353	134	120	80	55	44	305

표 10: 인도적 체류자의 국적별 구분

(단위 : 명)

합 계	시리아	예멘공화국	미얀마	중국	파키스탄	코트디부아르	기타
2,370	1,231	757	37	35	32	29	249

표 11: 출입국항 난민신청 현황(2017 - 2020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신 청	회 부	불 회 부
총 계	923	288	635
2017	190	22	168
2018	505	241	264
2019	175	13	162
2020	53	12	41

표 12: 난민통계 종합(1994 - 2020년 기준)

(단위 : 명)

신청	심사결정 종료(34,836)			난민 심사 중(20,094)		철회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 인정	불인정	1차심사	이의신청	
71,042	1,091	2,370	31,375	14,976	5,118	16,112

표 13 : 연도별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현황(1994 - 2020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94-'12	'13	'14	'15	'16	'17	'18	'19	'20
신청자	71,042	5,069	1,574	2,896	5,711	7,541	9,942	16,173	15,452	6,684
인정자	1,091	324	57	94	105	98	121	144	79	69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70	171	6	533	198	252	316	508	231	155

제2부 각 조항별 정보 (협약 제1조 ~ 제7조)

제1조 인종차별의 정의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

13. 대한민국의 제17-19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채택된 최종견해(CERD/C/KOR/CO/17-19)에서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부합하도록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접적 및 간접적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법률 제정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6)

14.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정책과제에 세부과제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를 포함하였다. 2020년 6월 「차별금지 법률안」, 2021년 6월 「평등에 관한 법률안」, 2021년 8월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하 그러나 성적 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법 제정에 지속적인 장애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제2조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정부정책

외국인정책기본계획

15.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외국인을 포괄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시행중이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를 국내 사회로 포용하기 위해 방송·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적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에 관한 통계 수집 메커니즘 수립 검토

16.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에 관한 통계를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국, 종교, 체류자격, 성별 및 서로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지표로 나누어 수집할 수 있는 메커니즘 수립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6)

17. 대한민국의 범죄 통계는 죄명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고, 피해자가 외국인인 범죄를 모두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종차별’을 별도 범죄 항목으로 규정하는 인종차별행위 처벌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에 따른 통계수집 메커니즘을 수립할 계획이다.

불법체류 외국인(illegal immigrants) 용어 사용

18. 위원회는 ‘불법체류 외국인(illegal immigrants)’ 용어의 사용을 철폐하고 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공식 문서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8 d)

19.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출입국관리법」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는 현행법⁹⁾상의 용어이다. 법 집행기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illegal immigrants)’을 대신하여 ‘미등록 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s)’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경우, 자칫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특히, ‘미등록 체류자’의 표현은 외국인등록을 한 ‘등록 체류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관광 방문 등 목적으로 단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해석되어 혼선이 생길 여지가 있다. 향후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대신 순화된 용어 선택 사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의 정의 확대

20. 위원회는 이혼 후 본국으로 귀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 이혼절차 및 자녀 양육 관련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적어도 한 명의 구성원이 한국인이 아닌, 모든 가족으로 확대하여 차별 없이 모든 가족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22 및 24)

21.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결혼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귀환한 자녀의 체류권, 교육권, 의료권 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부터 귀환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학업, 양육, 자립, 법률 등을 지원하는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0조의2제1항 등

22. 다문화가족 정책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 급증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최초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은 남녀 구분 없이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민으로 구성된 가족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인지·귀화자 가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2011년 4월 4일).

23.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정의 확대를 위해,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과 「난민법」 제2조제2호의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등을 ‘다문화가족’ 정의에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민과의 형평성 및 타 법률과의 중복문제 발생 우려 등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제4조 인종적 우월성이나 인종적 증오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인종차별적 행위에 기인한 범죄행위의 처벌

24.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 따라 인종차별 동기를 형사범죄의 가중 처벌 사유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6)

25. 대한민국에서 인종차별에 기인한 폭력·명예훼손·모욕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고, 처벌 정도에 있어서 인종차별이 범행동기로서 고려되고 있다. 인종차별에 기인한 폭력 행위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인종차별에 기인한 명예훼손·모욕 행위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각 처벌하고 있다. 범죄 행위가 인종차별에 기인하였다는 점은 법률에 의해 법관이 존중하여야 하는 양형의 조건 중 ‘범행의 동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로 기능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의 동기’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상 특별양형인자로서 ‘비난할만한 범행동기’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종차별에 기인한 혐오범죄, 혐오표현의 형사법적 규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표 14: 형법 제 51조(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2018 양형기준(2018년 8월 15일 수정 시행) 폭력범죄 양형인자의 정의

사.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거워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5조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평등 및 차별금지

출생 등록 및 무국적자 감소

26. 위원회는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28 및 35)

27.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가 마련 중인 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 아동)이 국내에서 출생할 경우, 부모 등이 그 출생 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는 부내 관련 부서간 시스템 관리 주체, 외국인등록번호 구성, 법률 공동소관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추후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를 위해 준비 중이다.

28. 대한민국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모 불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생지주의¹⁰⁾를 적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어 선천적 무국적자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적법」은 국민이 혼인, 인지, 입양 등 비자발적

10) 국적법 제2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천적 무국적 방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

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 보유신고제¹¹⁾를 두고 있으며, 반대로 외국인이 혼인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¹²⁾하는 등 후천적으로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선천적·후천적 무국적자 발생 방지를 위한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상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어,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한 출생등록 보장을 위한 별도 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 협약상 출생지국에 최종적 국적취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속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적법」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곤란하며, 정부는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무국적자 체류자격 부여 및 국적취득 기회 부여 등을 통해 무국적자의 안정적 국내 체류를 지원할 것이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무국적자는 총 156명이며, 이 중 외국인 등록 후 체류 중인 자는 102명이고,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는 54명이다.

표 15: 체류 중인 무국적자 관련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입국시 무국적	국적취소	본국 출생신고 누락	귀화 후 원국적미포기	기 타*
장기 체류	102	42	24	13	12	11
단기 체류	54	관광(B-2), 단기(C-3) 사증으로 입국				

* 탈북화교 4, 난민 5, 국적무효 2

29. 외국인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시 「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입증서류로 통상 외국 여권을 제출 받고 있다. 다만, 생모의 출신국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여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정부는 여권에 준하는 서류도 인정하고 있으며, 생모의 국적국 법령이 그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외국 여권을 제출받지 않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 (관련 두 예시는 아래 표 참조). 예시와 같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외국 여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인정되면, 정부는 다른 대체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간소한 절차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 자녀가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적취득 기회를 부여하여 조기 신분관계 정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1) 국적법 제15조 제2항은 혼인, 입양, 인지, 외국법률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 의사를 신고하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12) '11년부터 혼인귀화자 등에 대하여 복수국적 보유를 용인

표 16: 외국인 입증서류 관련 예시

(예시 1) 중국의 경우 해외 출생 자녀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를 여권에 준하는 서류로 인정하고 있음.

(예시 2) 한국인 부와 말레이시아 모의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는 말레이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함. 이에 자국(말레이시아) 정부 확인절차를 거쳐 여권제출 없이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고 있음.

난민인정심사가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30. 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가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난민신청자와 난민에 관한 모든 결정이 보호 필요성에만 근거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출입국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전해 14)

31.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난민전담공무원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난민전담공무원은 일정시간 이상 난민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교육 성적을 교육 이수 실적평가에 반영하여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난민전담공무원 중 일정 인원을 특별히 지정하여 최장 5년간 난민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등 의사와 무관한 전보를 제한함으로써 난민업무에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이의신청 심의 지원부서인 ‘난민심의과’를 기존 ‘난민과’에서 분리 신설하고 기존의 ‘난민과’는 1차 심사기관(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난민심사 정책수립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난민정책과’로 개편하였다. 또한, 정부는 난민심의과 신설을 통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절차의 신속·공정·전문성을 강화하여 국제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진정한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32.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난민심사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등 외부기관과 협업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확대하였고, 개별 국가정황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육을 체계화하고 난민심사 매뉴얼, 난민소송판례집 등 난민심사 관련 자료를 발간 공유함으로써 난민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난민조사관을 대상으로 연구모임을 신설하여 사실조사 기법 연구, 난민소송 판례 분석, 주요 난민신청 국가의 국가정황정보 분석 등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0년 5월부터 유엔난민기구, 시민사회

단체, 학계 등 외부 난민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하고, 이의신청 사실조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관련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난민심사 및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존 난민심사 및 이의신청 심의 담당자가 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박해 가능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출신국 정보를 직접 조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저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난민신청자의 출신 국가 관련 지역학을 전공하고, 어학능력이 뛰어난 외부 민간 전문가를 국가정황 조사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국가정황정보 조사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집한 국가정황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난민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기하였다.

33. 대한민국 「난민법」은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무부는 난민심사관 외 난민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을 별도로 규정하여 난민심사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이 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사실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난민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등에 명시한 난민의 지위 및 처우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행 「난민법」은 이의신청을 전담하는 난민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이를 50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전문가 비중을 확대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원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는 등 이의신청 심의 과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과 별개로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난민심사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주요 국가의 난민전담공무원 선발기준 및 교육방법을 참고하여 난민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난민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34. 대한민국 「난민법」은 난민 신청을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표명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 난민신청자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난민신청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허용,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통역지원, 난민신청자와 면접에 동석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등을 규정하여,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절차에서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이 입국하는 공항·항만을 비롯하여 난민신청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는 각 출입국관서에 난민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난민신청절차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치하는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종합안내(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에 난민신청절차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신청자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정부는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난민심사 절차 및 체류 시 유의사항을 정리한 전자파일 형태의 책자를 개별적으로 교부하는 등 난민신청자가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5.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난민면접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도록 하여, 난민심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별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6. 대한민국 「난민법」은 난민인정심사 과정 중 난민면접시 난민신청자에 대해 통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법무부는 다양한 출신국가·배경으로 인한 언어적 한계 및 열악한 지위로 인해 난민이 난민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과정에서도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해 신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하는 등 통역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37.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에서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권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편성하거나 신설하도록 하여 인권교육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출입국관리직 신규자 교육과정에 ‘외국인과 인권’, ‘외국인보호실무’, ‘이민 통합이해’ 등 외국인 인권 관련 과목을 필수 편성하여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교육하고 있으며, ‘체류관리 역량강화’ 과정을 2021년에 신설하고,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인권침해 방지’, ‘근로계약 법제’ 과목을 편성하고 교육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에는 이민자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보호, 다문화 감수성 훈련,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과제, 난민 보호 실무, 근로계약 법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연수원은 2016년 112명, 2017년 239명, 2018년 224명, 2019년 249명, 2020년 131명, 2021년에는 232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이민자, 난민,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연수원은 사이버 교육과정에 ‘제한 외국인이 들려주는 상호문화의 이해(10차시)’, ‘난민위원 과정(12차시)’, ‘보호외국인 상담과정(5차시)’을 신규 개설하여 출입국관리직을 포함한 더 많은 법무행정 공무원들이 인종차별 금지 등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표 17: 출입국관리직 이민자, 난민, 다문화 등 외국인 관련 교육현황(2016~2021년)

연도	교육기간	과정명	교과목	교육인원
2016	4.6.~4.8.	이민통합실무	결혼이민자 정책	20
			이민자 정착지원 정책	
			이민통합 정책	
	6.22.~6.24.	출입국 인권감수성	인권과 인권감수성	18
	7.20.~7.22.	난민심사실무	UNHCR과 난민보호	18

	9.7.~9.9.	출입국 인권감수성	인권과 인권감수성	20
	11.7.~12.9.	출입국 9급 신규자	유럽 및 영미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북한의 현실 이민통합 이해 난민 실무 외국인보호 실무	36
4개 과정 (5회)				112
2017	2.22.~2.24	난민심사실무	UNHCR과 난민보호	20
	3.8.~3.10.	이민통합실무	결혼이민자 정책 이민자 정착지원 정책 이민통합 정책	19
	8.21.~9.1.	출입국 9급 신규자(경채)	이민통합 이해	43
	9.4.~9.29.	출입국 9급 신규자	외국인과 인권 중국어문화의 이해 북한의 현실 이민통합 이해 외국인보호 실무 난민 실무	157
3개 과정 (4회)				239
2018	1.17.~1.30.	출입국 9급 신규자(경채)	이민통합 이해	53
	8.6.~9.14.	출입국 9급 신규자	외국인과 인권 중동 역사와 문화 이민통합 이해 외국인보호 실무 난민 실무	171
1개 과정 (2회)				224
2019	2.25.~3.22.	출입국 9급 신규자	이민통합 이해 난민실무 외국인보호 실무	34
	3.25~4.5.	난민심사실무	난민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본 대한 민국 난민제도의 문제점 중동 정치상황 및 사회문화 아프리카 종교와 문화 UNHCR의 국제난민보호	33
	8.19.~9.27.	출입국 9급 신규자	다문화사회의 이해 외국인과 인권 중동 역사의 이해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 의 인권 이민통합 이해 외국인보호 실무 난민실무	182
2개 과정 (3회)				249
2020	2.24.~4.3.	출입국 9급 신규자	다문화 사회의 이해 이민통합 이해	62

			난민실무	
			외국인보호 실무	
			외국인과 인권	
	8.24.~8.28.	난민심사실무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	22
	8.31.~9.25.	출입국 9급 신규자	이민통합 이해	47
			난민실무	
			외국인보호 실무	
외국인과 인권				
2개 과정 (3회)				131
2021	2.1.~2.17.	출입국 9급 신규자	이민통합 이해	102
			난민실무	
			외국인보호 실무 I	
			외국인보호 실무 II	
	5.10.~5.28.	출입국 9급 신규자	외국인과 인권	69
			이민통합 이해	
			난민실무	
			외국인보호 실무	
	7.26.~7.30.	난민심사실무	러시아 국가정황	16
			카자흐스탄 국가정황	
	9.9.~9.10.	체류심사 역량강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인권침해 방지	(15)
			근로계약법제	
	10.25.~11.12.	출입국 9급 신규자	외국인과 인권	(35)
			이민통합 이해	
			난민실무	
			외국인보호 실무	
3개 과정 (5회)				232
5개 과정 (22회)				1,187

38.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상대하는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을 신설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교육 형태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추후 법무부는 동 과정을 정상화 하고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 18: 출입국관리직 인권교육 실시 현황(2016-2021. 8.)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교육인원(명)	298	484	509	388	115	145

39.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수시적으로 난민 심사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과정에는 국제인권법,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을 비롯,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난민통역인을 대상으로 난민의 개념 및

난민통역의 특수성 등 난민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난민통역 시 성별, 종교, 가치관 등에 편향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신청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는 등 난민통역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무부는 교육 내용에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난민통역인을 대상으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는바,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및 평가과정을 통과한 통역인에 한하여 난민심사 통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인증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편성하여 난민통역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난민전담공무원 및 난민통역인에 대해 정기·수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난민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및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인권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등 인권교육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혼인단절 책임 또는 자녀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내체류

40.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 체류할 수 없다는 이전 제 17-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의견(최종견해 21)은 사실과 다르다. 결혼이민자의 혼인단절 후 체류허가 요건·기준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녀양육 및 가족구성원 부양, 혼인 단절 책임 입증 등은 부부 쌍방의 책무일 뿐 전통적인 여성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다.

41. 결혼이민자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까지 국내 계속 체류를 허용하라는 권고는 수용하기 곤란하다. 대법원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대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 계속 체류를 허용함이 적절하다고 판결한바 있다¹³⁾.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체류 ombudsman을 두고, 필요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체류 ombudsman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혼이민자의 혼인단절 책임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2021년 1월부터 결혼이민자가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거주(F-2) 체류자격으로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혼인단절 책임 또는 자녀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이민자가 한때 국민의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하여 국내체류를 허용할 경우, 혼인단절 후 자녀양육 의무를 기피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오히려 국내체류 보장을 빌미로

13) 대법원2018두66869 판결

한 사기결혼, 인신매매 등 국제결혼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향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 및 국제결혼 당사자 모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 지난 2년(2020~21년)간 혼인단절 후 체류기간 연장신청 허가 건은 715건, 불허 건은 65건으로, 불허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4건에 대해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의 심의 실시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권리 강화 및 사회통합 촉진

42.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에는 정부가 주관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자본금 1억원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등 영세 소규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화 및 내실화를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43.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결혼 당사자의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8년부터 결혼이민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전 외국 현지에서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갈등과 같이 입국 후 겪게 되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국 출신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결혼 상대국가의 문화 및 외국인 배우자 초청절차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44.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전국 230개 지역에 설치된 ‘가족센터’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방문 교육(생애주기별 자녀의 양육 관련 교육, 자녀의 숙제 지도 등 생활지원 서비스), 통번역서비스,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에 대해서도 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로의 조기 정착을 돕고 있다.

45.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 등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전국에 이주여성 보호시설 3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시설에서는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거주가능하며,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훈련 등도 지원하고 있다.

46.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부터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 이주여성 상담원들은 13개 언어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병원, 경찰, 보호시설 등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47. 위원회는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조치 시행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모든 이주민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32 a)

48.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년 7월 시행)을 통해,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던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당연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적용이 유예되었던 외국인 유학생도 당연 가입(2021년 3월 시행)하도록 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난민인정자 외에는 당초 가입이 불가하였던 인도적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2019년 1월 시행).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 관련, 입국 즉시 가입은 당초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에 한하였으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2021년 3월 시행)을 통해 유학생에 확대 시행하였고, 비전문취업 및 영주 체류 자격자에게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추가 적용(2021년 10월 시행)하여 취약계층 및 국내 장기체류가 예상되는 외국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 외국인 전체가입자 확대 추이(명): 2018년 12월(97만) → 2019년 12월(124만) → 2021년 12월(126만)

49. 다음으로 정부는 이주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이주 아동, 난민 등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 보장 확대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2019년 1월 시행)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체류허가자와 그 가족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개정(2019년 7월 시행)하여 단독세대 미성년자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한 보험료 혹은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의 개념을 도입할 수 없어, 개인 단위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은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세대합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세대’ 개념을 도입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50.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수준의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소득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부는 외국인의 지역 보험료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2019년 1월 시행)하였다. 다만, 정부는 국내 장기체류가 예상되는 영주, 결혼이민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부과·징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종교·유학 등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 경감을 지속하여 적용하였으며,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2019년 1월 시행)을 통해 인도적체류허가자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30% 경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그간 체류자격별로 국한하여 보험료를 경감해 오던 것과 달리, 농어촌 거주 외국인은 22%, 섬·벽지 거주 외국인은 50%를 경감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2021년 10월 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적과 무관한 사회적 지원 제공

51. 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32 b)

5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원대상의 기본 요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 중 난민으로 인정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경제·생활권**으로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권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능력을 조사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부조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대상자 확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 대상자 확대 고려시, 도움이 필요한 결혼 이주민 등도 포괄적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로서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등을 의미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자격 보장

53. 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동등한 신청 자격 요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시행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32 c)

54.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마찬가지로 긴급복지제도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국적국과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긴급복지지원법」이 아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등)이 가능하다.

표 19: 법률상 긴급지원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시행령제1조의2)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55. 아울러, 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범죄의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이주민인 경우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나(최종견해 31), 범죄 가해자로서 구속 또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내국인도 공공부조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라 하여 차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등록 이주민

56.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방지하고 경찰 및 출입국 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시행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16)

57. 대한민국 경찰은 외국인의 미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해당 미등록 이주민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계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선제적인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은 미등록 이주민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igrants' Trade Union; MTU), 인권옹호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현재 경찰은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 및 홍보하면서 각종 범죄 피해를 입은 미등록 이주민이 피해 사실 신고로 인해 신변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주요 범죄피해자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관의 출입국관서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표 20: 경찰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활용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계	85	111	116	115	117	142	686

58. 또한, 경찰청은 경찰관 인권교육 고도화 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경찰관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동영상 자료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특히, 경찰관 인권행동강령(훈령)을 제정하여 차별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원칙 준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6조에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인권행동강령 해설서 등을 제작·배포하였고, 경찰관 인권교육 기본교재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 경찰관 대상으로 차별금지 원칙을 교육하고 있다. 경찰청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최소 연 6시간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차별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9. 경찰에서 임무수행 중 외국인이 미등록 이주민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계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여기에는 강제적인 체포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인계까지 포함된다.

표 21: 경찰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계한 미등록 이주민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계	8,546	6,105	7,426	9,782	8,268	40,127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주 외국인 자녀의 교육권 보장

60. 위원회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의무 교육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이주 아동의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학교에서 이주 아동의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30)

61.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기본법」의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 누구나 초·중·고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2조는 누구나 차별 없이 실질적인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주 아동의 경우에도 무상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학력인정 절차 보완’, ‘한국어 교재 보급’, ‘각종 교육 및 상담 지원’, ‘추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이주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국내에 외국인

으로 등록되지 않은(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학생도 학적을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정부는 초·중·고 입학 단계에서 불법체류자, 이주 아동 등에 대한 차별이나 입학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초·중학교 입학) 입학 배정 기본계획 및 배정실무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2022학년도 입학 단계에서 ‘입학 거부 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실시(2021년 10월)

* (고등학교 입학) 17개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2021년 8월)를 통해, 2022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불법체류자 및 이주외국인 등’에 대한 누락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실시

62.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사실상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범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와 그간 제도 시행 결과를 검토하여 2022년 2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 △6세 미만 영·유아기의 외국인 아동 또는 △영·유아가 지나 입국하여 6-7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부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63.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부터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사회문화교육 등을 제공하는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현재까지 레인보우스쿨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는 13,002명이다. 또한, 2013년부터 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1,264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탈북청소년 대상 남한 사회 적응지원을 위하여 입국 초기 문화체험과 교육제도·기관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였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청소년의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면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온라인교육에 대한 적응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64. 위원회는 a)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 촉진, b)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c) 체류가능 기간 연장, d) 비자 변경 허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및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여타 법률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10)

65.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는 비전문인력임을 고려하여, 정부는 단기순환(정주화 방지) 원칙에 따라 가족동반 및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외국인고용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는 입국 후 3년간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재고용 시 취업활동기간 1년 10개월이 연장되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취업활동이 허용되며, 재입국 특례 제도를 통해 4년 10개월 추가 근무(총 9년 8개월)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E-9)는 「외국인고용법」 개정(2021년 4월 13일)으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의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취업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며 최대 5년 10개월까지 취업 활동 및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비자가 발급되는 특성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66.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 시 최초 취업활동 기간 3년간 3회, 재고용 기간(1년 10개월) 동안 2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폭행, 임금체불 등 사업주 귀책)에 해당할 시 횡수 제한 없이 사업주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2017년 이후 4회에 걸쳐 외국인근로자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 22: 외국인근로자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현황

‘18.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가 자율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한 숙소 정보 중 숙소 유형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19.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3일 이내) 사업장변경제도 도입 ■ 숙소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가해자의 범위를 사용자 외에 사용자, 직장 동료,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 ■ 사업장 변경 허용 요건 중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와 같은 재량적 판단 기준을 삭제하고 요건을 명확화
‘19.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제58조의2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외국인노동자에게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변경 사유로 추가
‘2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등 추가 ■ 농지법, 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 농한기, 금어기 등 사유로 권고퇴사 ■ 가입의무가 있는 사회보험 등 미가입

67. 법무부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1일부터 ‘숙련기능인력(E-7-4)점수제’ 비자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대사항으로 동 외국인은 장기간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가족동반이 허용되며, 이후 관련 요건 충족시 영주권 및 국적 취득도 가능하다. 2021년 7월 현재까지 3,215명의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되었다(아래 표 참조).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매년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확대하고 있다(2020년 1,000명 → 2021년 1,250명).

표 23: 숙련기능인력(E-7-4) 자격변경허가 현황

2021년 7월 31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허가인원 (총 3,215명)	293	471	706	983	762

68. 위원회는 차별적 목적이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고용규정과 관행 등의 근로조건과 취업 요건에 관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차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적절한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차기 국가보고서에 근로감독 또는 여타 기관에 의한 방문, 위반사항 적발, 제재, 구제 및 처벌에 관한 통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종견해 12)

69. 현행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농림 사업,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날씨, 기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근로시간이 수시로 변경되고 휴게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해당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대한민국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70. 매년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제노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 점검항목 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균등처우,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등에 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처우,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도점검 결과, 근로조건 및 강제노동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처분 및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가 강제근로 및 폭행 등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고발 제기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및 사법처리하고 있다.

표 24: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현황

(단위: 개소, 건)

구 분	점검 대상	위 반 건수*	항목별 위반 내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기타 법령**
2017년	3,069	7,053	2,223	3,407	130	292	410	591
2018년	3,128	5,658	2,307	1,802	105	221	696	527
2019년	3,063	6,895	2,105	2,495	569	289	872	565
2020년	1,502	1,597	816	372	34	171	140	64
2021년	2,310	4,750	1,020	2,193	490	107	670	270

* 내·외국인근로자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관련 법 위반 건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표 25: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법률 위반시 조치 현황

(단위: 개소, 건)

구분	점검 업체	위 반 업체*	조치내역				관계기관 통보
			시정 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등	
2017년	3,069	1,550	6,255	8	264	134	392
2018년	3,128	1,855	5,040	6	178	84	350
2019년	3,063	1,672	6,391	1	181	58	264
2020년	1,502	555	1,443	17	78	37	22
2021년	2,310	1,334	4,597	3	47	58	45

* 내·외국인근로자 불문 관련 법 위반 업체

71.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뿐만 아니라,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강제노동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국내 입국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령·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력상담센터(1개소)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소)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강제노동 등에 대한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 피해를 적극 식별하기 위하여 피해사례 조사 시 통역원이 현장에 동행 방문하고, 피해사건 조사 시 동행 출석하도록 하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72. 위원회는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상 폭력을 방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체류자격을 침해받지 않고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16)

73. 대한민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이주노동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표적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15년 6월 25일 대법원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체류 외국인이 포함된 이주노동자는 합법임을 판시하였다.¹⁴⁾ 다만,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노조법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74.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단속 직원들에 대해 주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에 부합하는 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물리적 행사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받은 경우, 보호소(실) 내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인권국) 진정함을 통한 진정 및 법원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신청, 각 보호실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통한 외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의 두려움으로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인지 시 통보 의무면제 공무원의 범위를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였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통계, 사고 현황 등을 국회 등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고 있다.

7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14) 대법원 2007두4995

동일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8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조직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동 조합은 합법적인 노조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현재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비롯한 광주전남외국인건설노동조합, 전국외국인노동조합, 한국외국인노동조합 등 이주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제6조 외국인의 구제 및 피해보상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구제

76. 위원회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34)

77.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전체적 적용 범위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여러 지원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아래 표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체류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및 최근 3년간 구조금 지급 현황을 보여준다. 정부는 범죄피해구조금의 경우, 상호보증(Cross Guarantee Agreement)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범죄피해구조금을 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20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20년 11월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경우, 2021년 2월 법사위 1소위에 회부되어 향후 심의 예정이다.

표 26: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보증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Crime Victim's Compensation)을 지원 - 적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간병비·돌봄비용·취업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법체류나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법무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Crime Victim Support Center)를 통한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음 - 상호보증여부를 불문하고 스마일센터(Smile Center)를 통한 심리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부에서 운영을 위탁하여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료 및 임시주거를 제공 - 적법체류나 상호보증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국선변호인(Victim's Public Attorney), 진술조력인(Intermediaries),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의한 법률적 지원 |
|---|

표 27: 최근 3년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년도	총 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19	305	11,516,297	185	9,278,850	34	1,140,317	86	1,097,129
2020	206	9,567,057	145	8,214,365	27	985,276	34	367,416
2021	202	9,792,147	145	8,894,672	32	639,389	25	258,086

표 28: 체류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검찰청	7	9	14	25	24	17
(경제적 지원)	23,595	24,047	63,108	121,434	105,095	57,097
범죄피해자	132	128	210	226	214	135
지원센터	98,187	110,656	185,119	187,655	189,718	69,281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	483	607	592	340	247	419
(심리적 지원) (건)						
대한법률구조공단	25	40	37	65	47	24
(법률적 지원)	218,510	354,914	290,677	818,742	384,159	227,509

※ 범죄피해자 국적은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등으로 다양

이주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기간 관련 조치

78. 위원회는 즉시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주민 보호시, 그러한 보호의 적법성 여부가 독립적 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가능한 최단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주민에 대한 보호기간 제한을 설정하고 보호 이외 다른 대안적 조치를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위원회는 아동 및 미성년자의 구금을 피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18)

79. 보호의 적법성 여부가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63조를 개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청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행정심판, 법원에 의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등 사후 법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같이 강제퇴거

명령 등 외국인의 강제 송환을 위해 기한의 설정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80. 또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기간 제한 설정 및 보호 이외의 대안적 조치를 마련할 것과 관련하여, 보호기간 제한 설정의 경우 정당한 강제퇴거 집행을 거부하는 동기로 작용하여 강제퇴거 및 보호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보호기간 연장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현재 14세 미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호를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작업을 검토·추진 중에 있다.

표 29: 18세 미만 보호외국인 통계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66	55	73	86	28
14세이상 15세미만	3	0	1	3	1
15세이상 16세미만	4	4	4	6	2
16세이상 17세미만	26	18	11	20	6
17세이상 18세미만	33	33	57	57	19

81. 대한민국 정부는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보호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형법」 제9조), 보호 처분된 부모 외에는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의 편의를 위해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호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14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취업 중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출소 등으로 부득이 보호조치 하고 있으나, 정부는 보호일시 해제 등을 통해 보호를 최소화하고 있다. 2020년 보호 처분된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총 28명으로 전년(86명) 대비 33% 수준이다. 정부는 2012년 10월 1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를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등에 대해 공무원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18일 동 시행령 개정으로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담당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였다.

82. 「난민법」 제20조는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소로 하여금 보호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그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득이 보호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관련 법 규정 등을 고려하여 보호일시 해제 등을 통해 보호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보호

중 난민신청한 외국인은 신속하게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은 피보호 외국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강제퇴거 집행을 거부하는 동기로 작용하여 강제퇴거 및 보호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보호 중 난민신청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난민신청자에 한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도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 내 관련 부서간 협의를 진행하여, 대안적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3. 위원회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며, 이주 여성이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구제 수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20)

84.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외국인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 시설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숙식, 의료, 법률, 통역 지원과 함께, 귀국 지원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85. 대한민국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외국인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현재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의료·법률지원, 심리치료, 숙식제공, 보호·상담 지원 및 본국으로의 출국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쉼터 퇴소자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자립 및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룹홈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창업 등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모국어 상담을 위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2019년에 5개소, 2020년에 4개소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86.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미등록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20년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87.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2020년 10월)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2021년 3월)하고, 스토킹 범죄를 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경과를 분석·점검하여 젠더 폭력 가해자들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88. 종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나, 검찰은 2019년 4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외국인이라도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피해자(90일 이내 단기체류자 제외)라면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 피해자는 동 지침 규정상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편, 피해자가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더라도, 살인, 상해, 강간, 강도, 사기 등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 회복 관련 조치를 위해 검찰은 출입국관리소 등에 신상정보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사건의 수사 재판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피해자는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체류 연장 기간 만료 후에도, 검찰이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89. 2013년부터 성매매, 성폭행 등 피해자에 대하여 관련 수사나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비자(G-1) 체류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이는 성폭력피해자(G-1-11)에 대해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인바, 성폭력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종결 후에도 체류를 보장하는 것은 체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대한민국 내 외국인 체류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표 30: 기타(G-1-11) 체류자격변경허가

2021. 8. 18.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체류허가(명)	11	11	17	14	27	4

90.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인신매매 식별 지표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구제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법무부는 예술홍행(E-6) 자격자 중 유해공연 종사자(E-6-2)들에게 체류 허가 시 인신매매 피해식별 지표를 의무적으로 제출 받고 있으며, 피해자로 식별될 경우 여성인권센터 등 관계기관에 인계하고 있다. 식별 지표는 국문 및 영문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처 관계자와 분리 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영문본 외 타갈로그어와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배포하고, 성폭력 취약 계층 대상 업무 수행 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법무부는 2014~2019년까지 매년 2회(상·하반기) 여성가족부 주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참여 중이다(2020~2021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미 실시). 또한, 법무부는 성매매 강요 알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구제수단을 안내하고 있으며,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 여성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구제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인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하여 모색할 예정이다.

91. 검찰은 2015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¹⁵⁾를 제작하여 검찰청 외 각국 대사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유관기관에 배포하였고, 2019년 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아어, 네팔어, 아프가니스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등 17개 언어로 확대 배포하고 있다.

92. 검찰은 2019년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16개 언어¹⁷⁾로 번역한 리플릿¹⁸⁾을 제작하여 각국 주한 대사관 등 외국인 관련 유사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전국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은 외국인 범죄피해자 상담을 위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3자 전화 통역 서비스’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2020년에 검찰청은 외국인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 후 자막 제작하여 이주민 방송국(MNTV)을 통해 홍보한 바 있고, 검찰 피해자 지원 홍보 SNS(대검찰청 형사 4과 계정 페이스북, 유튜브 등)를 통해 홍보하는 등 이주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93.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심리적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 상황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체류자격과 무관히 범죄로 인한 피해임이 명백한 경우 법률, 의료,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15) (영문명) Guide to the Rights and Support of Foreigner Victims of Crime

16)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아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17개 언어

17) 네팔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아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등 16개 언어

18) (영문명) A Comprehensive Guide to Legal Rights of and Support for Foreigner Crime Victims

인신매매 관련 법률 제정 및 피해자 지원

94. 위원회는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고, 피해자들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 가해자 처벌 및 재활을 포함한 보상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26)

95.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관련 범죄군을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¹⁹⁾」에 합치하도록 규정하고, 내외국인 피해자를 망라한 인신매매 피해 신고접수, 구조, 보호 및 법률·의료·생계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범부처 협업, 인식제고 등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추진에 대한 사항 등을 포괄하여 규정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준비작업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96. 검찰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료비, 생계비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더라도 살인, 상해, 강간, 강도, 사기 등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 등에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사건의 수사 재판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피해자는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체류 연장 기간 만료 후에도, 검찰이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한 교육, 문화, 홍보

혐오발언 대응

97. 위원회는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 오해,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며, 난민의 권리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난민과 지역주민 간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8 a)

98. 법무부는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난민 관련 학술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현행 난민정책에 관한 각계각층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2016년 6월 23일),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 학술포럼(2017년 6월 19일),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 학술포럼(2018년 6월 18일), ‘이주의 시대, 난민에 대한 새로운 정책

19) (영문명)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접근과 사회적 성찰' 학술포럼(2019년 6월 19일) 등도 개최했다. 법무부는 2018년 제주도 입국 후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들의 사례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특히 무슬림 난민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혐오 감 표출을 자제시키기 위해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 난민문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해소하고, 난민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시·군·구 외국인복지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행 난민정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2020년 11월). 법무부는 향후에도 난민 관련 무분별한 오해, 편견을 해소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정부간행물 3,194개에 대해서 외국인 차별표현을 점검했고, 외국인 차별표현 방지를 위해 정부간행물 발간 시 사전점검 절차 등 차별표현 방지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2021년부터 외국인 관련 간행물과 인터넷·사회관계망 게재물에 대해 상위 부서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전 감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방송매체에서의 인종차별 방지·대응 노력

99. 위원회는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종혐오를 선동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실효적 이행 확보를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8 b, c)

1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 매체에서의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특정 인종을 조롱·모독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심의하고, 방송사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과징금 등을 결정한다. 위반 방송사는 심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 조치 등을 받았음을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심의 제재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사 평가 및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반영하여 방송사의 심의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101. 대한민국 정부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차별적 표현 및 왜곡, 선정적 표현 등을 바로잡기 위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2015년 9월)하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방송언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방송 제작 및 방송사의 자사 프로그램 자율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매년 방송언어조사자료집을 발간하여 공유하였다. 또한, 정부는 방송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방송언어 관련 교육·홍보를 수시로 시행하는 한편, 방송사업자의 책임 부여 및 방송시청자에도 교육 효과가 있는 방송언어 순화 캠페인을 매년 2회 실시하는 등 방송언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02.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조장, 조롱·모독 등의 표현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 하여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조장, 차별 표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부 기타

국제협약 비준 검토

103. 위원회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등의 비준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35)

104.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강제실종의 범죄화 및 처벌을 요구하므로, 동 협약에 대한 비준·가입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법제 정비의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19년 12월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 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20년 4~9월간 「강제실종방지협약 주요 당사국의 국내 법제 비교 및 시사점 연구」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법무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가입 방안의 모색 및 관련 국내 법제의 사전 검토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2021년 6월 29일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바, 이러한 국회의 동 협약 비준·가입동의안의 조속한 제출 촉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협약 가입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10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상의 모든 이주노동자 자녀의 출생등록 및 국적 부여(제29조),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 보호 및 촉진 조치 의무(제44조), 취업을 위하여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자영업 종사가 허가되는 조건을 설정할 의무(제52조제4항), 비정규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정규화 조치 노력(제69조제1항) 등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협약 비준 관련 정부 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고 있으며, 정부는 동 협약의 비준 여부를 「출입국관리법」 등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후속조치

106. 위원회는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이를 보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견해 36)

107. 대한민국 정부는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Human Rights, 이하 NAP) 내에 관련 정책과제를 다수 포함하였다. 제2차 NAP(2012-2016년)의 이행을 통해 정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난민 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 확충,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시행,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8년 8월 발표된 제3차 NAP(2018-2022년)는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동법 제8조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외국인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간 사업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부처 간 연대 및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제3차 NAP에서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등의 과제를 담고 있으며, 정부는 방송에서의 인종·문화 등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에 대한 심의 강화 등 관련 세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후손을 위한 10년

108. 위원회는 금번 보고서에 ‘아프리카 후손을 위한 10년’ 차원에서 채택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종견해 37)

109.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6월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한-아프리카 재단’을 공식 출범하고, 한-아프리카간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과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한-아프리카 청년포럼,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등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청소년간 교류를 활성화하였으며, 국회 아프리카새시대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법기관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진하였다. 정부는 매년 6월 ‘아프리카 주간’을 개최하여 각종 문화교류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후손에 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정부는 석사학위연수 등 각종 교육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인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은 물론, 아프리카 과학·기술인력 양성 지원 기금을 설립하였고, 공무원·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및 연수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끝.